



수신처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언론사
참고	언론사 사회부
내용	전북지역 5대 인권이슈
담당자	채민 (010-8639-0214, 063-278-9331)

[보도자료]

## <2012년 전북지역 5대 인권이슈>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언제나 그렇듯이 2012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해 전북 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 중에는 인권 분야의 문제들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회적 공분과 비판적 여론을 불러왔던 지역의 인권 사안을 돌아봄으로서 지역사회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역에서 발생했던 여러 인권 이슈들 중에서 '2012년 전북지역 5대 인권이슈'를 선정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의 종합 뉴스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을 통해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전북지역의 인권 상황을 드러내는 상징성,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의 사회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4. 지역 사회단체들과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2012년 전북지역 5대 인권이슈

# 〈2012년 전북지역 5대 인권이슈〉

## 〈이슈1〉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무산

- 작년 11월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이어 올해에도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무산.
- 올해 10월에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태도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흐름과 제도적 필요성에 여전히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였음.

## 〈이슈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지침’ 강행

-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현장과 인권·교육단체들의 학생인권침해 문제제기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강행.
- 또한 교과부는 학생인권침해 우려로 지침을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선 특별감사와 이에 따른 징계라는 무리수까지 두는 등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접근보다는 정치적 갈등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도 했음.

## 〈이슈3〉 회사의 불성실한 노사교섭으로 인한 전주시내버스 노동자 2·3차 파업과 전북고속 노동자 장기 투쟁

- 작년부터 시작된 전주시와 버스회사가 노동자들의 기본권 요구를 외면하며 버스노조가 3월에 2차 파업, 11월에 3차 파업과 삼보일배 등을 진행. 12월에 들어 전주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자들은 시청 광장 농성과 삼보일배 잠정 중단.
- 전북고속의 경우 노동조합이 2012년 11월 기준으로 700일이 넘게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노조 인정을 거부하는 회사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음. 3월에는 노조 대표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호소의 차원에서 단식을 시작해 50일 넘기기도 했으며 12월에는 노조 집행부가 고공농성에 돌입. 전북도와 노사가 만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론을 끌어내며 고공농성 중단.
- 노동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권리인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이에 대해 방관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되었음.

## 〈이슈4〉 전주비전대·전주대 청소노동자 6차 파업

- 전주비전대와 전주대 청소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주)온리원을 대상으로 5월에

6차 파업에 돌입함. 노동자 삼보일배 등을 통해 교섭을 거부하는 회사의 부당함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 회피에 대한 여론화.

- 전주비전대·전주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으면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상황과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이슈였음.

### 〈이슈5〉 전주시청 출입통제 훈령 발표 논란

- 전주시가 11월 들어 시설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출입통제 훈령을 제정하며 시민사회단체 반발을 불러 일으킴. 특히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해요소로 보는 태도에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음.

-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통한 풀뿌리 지역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전주시 행정을 돌아보게 되는 이슈였음.

※ 5대 인권이슈 외에도 아래와 같은 인권 이슈들이 전북지역의 인권 상황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슈들이었습니다.

-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행 사건 수사
- 군산 출신의 삼성직업병 피해 노동자 사망
- 통일운동 단체인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 전북지역 KT노동자, 부당해고로 복직 후에 징계탄압
- 전주교도소의 재소자 알몸검신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전주MBC노동조합의 약 130여 일간의 파업 진행
- 개인정보보호를 도외시한 전주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 문제
-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전주시 완산구청 전동휠체어 안전운행서약서 작성 요구
- 전북개발공사의 직원 e-메일 검열 논란
- 부안군 버스회사 새만금교통 폐업에 따른 노동자 생존권 문제
- 부안교육지원청의 집회 참석 학생에 대한 지도 공문 발송 문제
- 전북지역 일부 학교의 지문인식기 설치 문제